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985 |
|----------|------|

발의연월일 : 2024. 11. 28.

발 의 자 : 이개호 · 이기현 · 박홍배
정진욱 · 어기구 · 김영배
이정문 · 위성곤 · 서영교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 중 “제39조의19”를 “제39조의20”으로 한다.

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지를 각각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로 하고, 제3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

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9조의17제9항”을 “제39조의18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9조의17제5항”을 “제39조의18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9조의16제2항”을 “제39조의17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의20제5항”을 “제39조의21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u>제39조의19</u> 에 따른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u><신 설></u> |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9조의20</u> ----- ----- <u>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u> |

| | |
|--|---|
| | <p><u>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u></p> <p><u>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u></p> |
| 제39조의15 ~ 제39조의21 (생략) | 제39조의16 ~ 제39조의22 (종전 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지와 같음) |
|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1조의2(과태료) ① ----- ----- -----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 | 2. 제39조의18제9항----- ----- ----- |

| | |
|--|--|
| <p>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 의 장</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2. (생 략)</p> <p>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 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 니한 노인학대행위자</p> <p>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 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 자·가족</p> <p>④·⑤ (생 략)</p> | <p>----- ---</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39조의18제5항----- ----- ----- -----</p> <p>③ ----- ----- -----.</p> <p>1. 제39조의17제2항----- ----- ----- -----</p> <p>2. 제39조의21제5항-----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
|--|--|